종가세→종량세 개편… 맥주업계, 채용·투자로 화답

개편안 가시화… 이르면 내년부터
생산공장·양조장 증설 등 투자 확대
시장 급성장 예상에 일자리 창출도

주세 개편안이 가시화되면서 맥주업계가 투자와 채용으로 화답하고 있다. 정부도 종량세 전환으로 맥주업계가 고용창출 효과와 신규 설비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일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 종량세 전환은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며 9월 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으로 맥주 주세는 L당 830.3원으로 현재 L당 주세액 대비 10원 가량 감소한다.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2년 간 리터당 830.3원에서 20% 경감한 664.2원으로 발표했다. 주세는 국내 대기업 3사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원가가 높은 고급 수입맥주와 수제맥주의 세부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비맥주 이천공장. /오비맥주

맥주업계는 주세 개편을 앞두고 투자에 적극적이다. 오비맥주는 지난 4월 오는 2021년까지 최소 1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안에 이천공장에 수제맥주 생산라인 신설을 완료해 맥주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수요 증가에 맞춰 '구스아일랜드'와 '핸드앤몰트' 등 수제맥주 신제품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제맥주 1위 업체인 제주맥주는 현재 제주 양조장 증설 공사를 하고 있다. 이달 공사가 완료되면 500㎖ 캔 기준으로 연간 1800만캔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보다 생산량이 4배 증가하는 수준이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주세법이 개편으로 크래프트 맥주 시장이 커질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장 증설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수제맥주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도 지난달 경기도 이천에 연간 500만L의 맥주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양조장을 완공했다. 수제맥주업체인 아트몬스터도 종량세 전환을 예상하고 올 8월 12억원을 투자해 공장 증설을 준비 중이다. 수제맥주업체로는 적지 않은 15명의 신규 채용 계획도 밝혔다.

수제맥주 브랜드 생활맥주는 주세 개편안에 맞춰 추가적인 인재 채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채용 분야는 전략기획, 직영관리, 맥주기획, 운영지원 등으로 전 분야다. 주세 개편에 따라 향후 국산 맥주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각 분야별 우수 인재를 발굴해 사세 확장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진 생활맥주 대표는 "주세 개편은 국산 맥주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맥주 플랫폼을 강화해 소비자에게 더욱 수준 높은 맥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신규 설비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 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가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저무는 세수호황… 지난해보다 5000억 덜 걷혀

누계 세수 감소세는 누그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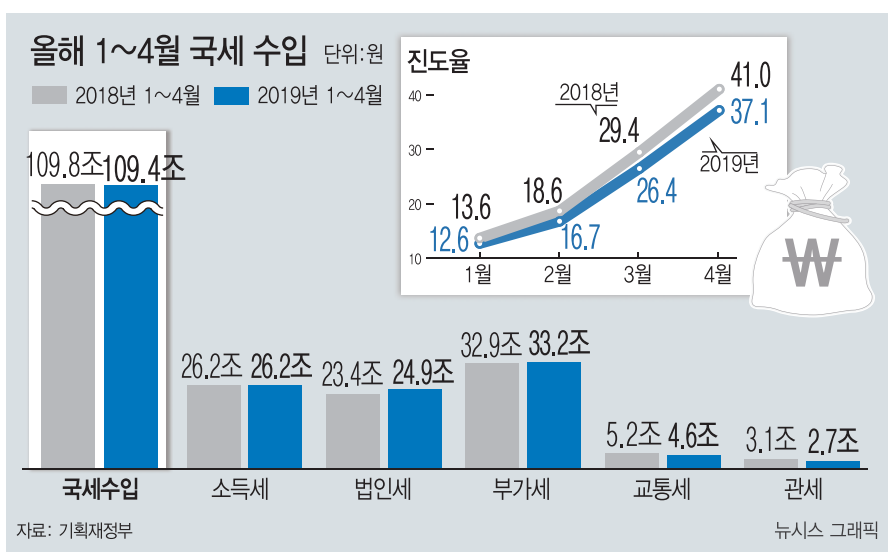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나타난 누계 세수 감소세는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 4월에는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는 늘어나면서 감소 폭은 다소 누그러졌다.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4월 국세수입은 31조4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000억원 증가했다. 4월 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17조1000억원이었다. 수출감소 등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증가 등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은 4월까지 누계로 13조5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39조3000억원 대비 34.4%를 집행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51조3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교역조건-성장률 관계성
글로벌 충격별로 달라져

교역조건과 경제성장률이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역조건과 국내 경제성장의 관계가 글로벌 충격 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교역조건 악화 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시 경제성장률이 상승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5월호 '글로벌 충격이 교역조건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세계 수요 확대 ▲원유 공급 축소 ▲반도체 공급 축소 등 세 가지 글로벌 충격 별로 교역조건과 경제성장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교역조건과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별로 상관관계가 달랐다.

1990년대 초에는 교역조건과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됐지만 2000년대 중반에는 교역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양호했다. 반면 2014~2016년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됐지만 성장률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뜻하는 순상품교역조건을 기준으로 교역조건을 판단했다.

분석 결과 세계경기 호조로 수요가 확대되면 수출입가격이 모두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크게 올라 교역조건은 악화됐다. 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수출 증가로 성장률은 상승했다. 또 원유 공급 축소 충격 발생 시 교역조건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공급이 축소돼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수입가격이 상승해 교역조건은 악화됐다. 성장률도 생산비용이 늘고 실질소득이 줄면서 하락했다. /김희주 기자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6500개 미인증 기관도 포함

3년마다 보육 품질 평가 받아야
평가 거부시 시정명령·운영정지

모든 어린이집이 이제부터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6500개 미인증 어린이집도 포함돼 보육 환경이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오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 의무제로 전환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45만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이 정지된다.

올해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는다.

평가 항목도 개선됐다. 복지부는 항목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B·C·D 등급으로 구분된다.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맡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제도도 12일부터 시행된다.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과 보육교사가 근무를 다시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시행돼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